



안보전략논단

www.korva.or.kr

발행인: 신상태 | 편집인: 김진수 | 발행처: 대한민국의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원 Vol.24('23-2) | 2023. 2. 1.

김정은의 도발에 흑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려면?
문성목

존폐의 중대 기로에 선 '9·19남북군사합의서'
박동순

영화 '영웅'이 불러낸 일본 다시보기
박순제

김정은의 도발에 흑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려면?

문 성 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향군 안보전략연구원 편집위원장)

우리를 향한 김정은의 도발은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같이 폭주하고 있다. 2022년 한 해 동안에만 30여 차례 70여 발의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했고, 각종 미사일에 전술핵을 장착하여 우리를 직접 공격할 수 있도록 핵무력 법제화도 이루었다. 이제는 우리에게 핵 공격 협박을 노골화하고 있다. 서울이 핵 과녁임도 숨기지 않는다. 급기야 지난해 말에는 대낮에 무인기를 우리 영공을 침범시켜 헤집고 다니는가 하면,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 에서는 남한을 적으로 재차 규정하고 (우리를 향한) 핵탄두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도 지시했다. 그리고 1월 1일 600밀리 방사포 발사로 올해도 도발의 수위를 높여 나갈 것임을 예고했다. 이제 우리는 김정은의 대남도발 의도를 정확히 간파하고 그 의도를 좌절시켜야 한다.

김정인이 대남도발을 이어가는 속내는 무엇일까?

첫째, 김정은의 실패를 덮고 내부 결속을 유도하려는 의도이다. 집권 이후 김정은의 패착으로 북한 주민들이 극심한 어려움에 처하자 이를 덮어 보려는 기만행위이다. 2012년 김일성 100회 생일 기념 육성 연설을 통해 김정은은 “북한 주민들을 다시는 허리를 졸라매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공언했다. 하지만 집권 10년이 지나도록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김정은 1인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

하는 일은 외면하고 핵·미사일 개발에 매달렸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 외부 위협을 조장하여 김정은 자신이 최강국 미국과 이를 추종하는 남한을 강력한 핵·미사일로 압도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포장하여 주민들의 동요를 막고 충성을 유도하려는 꼼수이다.

둘째, 대남적화전락을 달성하려는 의도이다. 이를 위해 우선, 한미 이간과 연합억제력 약화를 시도한다. 한미연합연습 중단과 전략자산의 전개도 차단하려 한다. 1950년 6월 25일 김일성이 기습남침으로 대남 무력통일을 시도했지만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결성된 유엔 군에 패퇴했다. 이후에도 김일성은 절치부심 제2의 6.25를 꾸준히 준비했다. 핵·미사일 개발도 그 연장선이다. 재침을 시행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한미동맹이다. 김정은은 2018년 가짜 비핵화를 내세우며 한미연합연습의 중단을 유도하고, 이후 수년 동안 미사일 역량 강화의 기회로 악용했다.

셋째, 남남갈등을 조장하려는 속셈도 있다. 북한 비핵화는 지지부진하고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하자 윤석열 정부는 이를 억제하기 위해 한미연합연습을 정상화했다. 미 항공모함 등 주요 전략자산이 전개하여 연합훈련을 이어갔다. 그때마다 김정은은 각종 도발로 협박 하면서 긴장 고조는 남한 정부 때문으로 몰아갔다. 실제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강대강 구도로 가면 남는 것은 전쟁뿐 아니냐면서 강경 일변도 보다는 북한을 달래 주는 목소리를 낸다. 하지만, 김정은의 도발에 미지근하게 대응한 결과 우리를 얽잡아 보는 행동일 수 있다. 지난 정권에서 북한에 저자세로 우리가 과연 얻은 것이 무엇인가?

이제 김정은의 대남도발 의도를 단호하게 좌절시켜야 한다.

첫째, 김정은의 거짓이 드러나도록 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는 북한 주민들 에게 진실을 알려주는 일이다. 지금 북한의 고통은 김정은 정권의 야욕과 무모한 핵·미사일 개발 때문이며, 이것이 고통의 본질임을 알려줘야 한다. 김정은 정권은 핵이 마치 북한을 지켜주는 보검으로 선전하나 핵이 북한을 지켜줄 수 없음을 알려줘야 한다. 핵이 있는 구 소련도 망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주지시켜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고했듯이 김정은이 추가 도발한다면, 남북합의 이행을 유보하고 대북확성기를 비롯한 각종 심리전을 즉각 재개 해야 한다. 김정은 정권의 아킬레스건인 북한 인권문제도 꾸준히 제기해야 한다.

둘째, 한미동맹이 더욱 공고함을 보여줘야 한다. 김정은이 도발과 협박 수위를 높일수록 동맹은 더욱 단단해진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각인시켜야 한다. 조만간 한미는 확장억제를 위한 도상연습과 11일 연속으로 한미연합연습을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 국민은 북한 도발과 협박에 맞서 하나 되어 대응해야 한다. 김정은 정권의 도발을 규탄하고 대응하는데 온 국민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셋째, 북한 도발시에는 즉각 강력 응징해야 한다. 도발에는 반드시 혹독한 댓가가 뒤따 른다는 사실을 주지시켜야 한다.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우리 군은 북한 도발시 원점은 물론 지원세력과 지휘세력까지 응징할 것임을 천명했다. 이후 북한은 원점이 노출된 도발을 자제하고 있다. 북한 무인기 도발시 우리 무인기를 북한 영공으로 보낸 것은 지극히 당연한 조치이다. 윤 대통령이 3축 체계 중 대량응징보복 역량을 압도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은 그런 의미이다.

존폐의 중대 기로에 선 ‘9·19 남북군사합의서’

박 동 순

(한성대학교 교수)

(향군 안보전략연구원 편집위원)

불안정한 정전협정과 북한의 지속된 도발 의도

1953년 7월 27일, 한반도에서는 3년 1개월 2일간의 전쟁을 멈추는 정전협정이 체결되어 올해로 70주년이 되었다. 협정의 정식명칭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이다. 정전협정의 의무 조항으로 3개월 안에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을 협정 당사국 간에 논의하기로 했다. 1954년의 제네바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협정에 대해서 구체적 논의가 되어야 했지만, 공산국가 측과 미국 측의 견해 차이로 인해 실질적인 논의가 되지 못하여 불안한 정전체제가 유지되었다.

이후 유엔사령부에 군사정전위원회가 설치되어 정전협정을 관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다양한 도발을 시도하여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관계를 유발시켰다. 북한은 이를 통해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세습되는 독재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해 내부를 결속함과 동시에 남한을 정치·사회적으로 불안하게 하였다. 북한은 미국이 한반도의 분단과 6.25 전쟁의 기원과 실패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6.25 전쟁 이후 미군의 한국 주둔, 남방 3각 관계의 구축, 그리고 미국의 동북아 전략 등을 안보위협 의 가장 큰 요인으로 인식해왔다. 북한의 지속된 도발은 남·북한 간의 긴장이 주한미군의 존재로 야기되고 있다는 사실을 한국 국민들에게 인식시켜 주한미군에 대한 거부감을 확산시키고 조기에 철수하도록 하여 한반도의 공산화를 시도할 수 있는 기회(결정적 시기)를 조성하려 하였다.

북한은 지난 정전 70년 동안 한국을 혼란에 빠지게 하고, 대남 혁명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공작과 도발을 지속해왔다. 대남공작은 무장간첩을 남파하여 한국사회를 혼란에 빠트리거나 남한 내에 ‘혁명기지’ 구축을 추진하였다. 북한의 도발행태는 남북한 간의 불신과 오해, 상호 불인정, 긴장과 대립 등을 불러오게 되었다. 이처럼 북한의 도발과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은 북한에 의해서 주도되어 왔으며 지금까지의 남·북한 갈등구조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행태와 한국의 대응조치에 따른 상호작용의 결과로 볼 수 있다.

9·19 남북군사합의의 체결과 북한 위반 및 도발의 확대

2018년 남북한은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9·19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약칭 군사합의서)’를 채택하였다. 군사 합의서는 남북한이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으로 지상과 해상, 공중 모두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지하기로 했으며, 당시 한국 정부와 군은 “평화정착에 필요한 진일보된 조치”라고 발표하였다.

9·19 남북 군사합의 체결 이후 남북한은 합의 이행을 위한 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 비무장지대(DMZ) 내 상호 11개의 최전방 감시초소(GP) 시범 철수를 비롯해 육·해·공 접경지역에서의 적대행위 중지,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중부전선 화살머리고지 일대의 공동유해 발굴을 위한 남북한 연결도로 개설, 한강 하구 지역의 남북공동 조사,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의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적대 행위들도 중지하였다. 특히 MDL을 기준으로 총 10km 폭의 완충지대를 설정하여 이곳에서의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함에 따라 육군 연대급 이상 기동훈련과 기갑 차량을 이용한 실기동 훈련도 사라졌다. 해상에도 북방한계선(NLL) 일정구역을 완충수역(서해 135km, 동해 80km)으로 설정해 해군 함정의 기동훈련과 포 사격을 중지하여 ‘분쟁의 바다’를 ‘평화의 바다’로 전환하였다. 공중에서는 MDL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서부 20km, 동부 40km)을 설정하여 남북한 군 정찰 항공기의 비행을 제한하였다.

이 같은 9·19 남북군사합의의 실제 이행조치는 기존의 선언적 수준에 그쳤던 과거 합의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 주었고 남북한 군사적 긴장완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북한은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이후 비핵화 협상 진전이 이뤄지지 않자 9·19 남북 군사합의 이행에 주저하기 시작했다. 북한은 화살머리고지 일대의 공동 유해발굴과 비무장지대 내 모든 GP 철수를 위한 논의는 중지되었고, 서해 평화수역 조성 등을 논의할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도 불응하였다.

그러면서 북한은 탄도미사일 등을 발사하며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기 시작했다. 북한은 2022년 10월부터 한국군의 정상적인 훈련을 트집 잡아 동·서해상 NLL 북방 해상완충구역 안으로 포병 사격을 가하였으며, 11월에는 정전협정 이후 최초로 북방한계선(NLL) 이남인 속초 근해 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다. 또한 12월 26일에는 소형 무인기 5대를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침투시켜 서울 상공까지 휘젓고 다닌 사례는 군사합의를 정면으로 무시한 행위였다. 북한이 현재까지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은 17회이며, 특히 2022년 10월 이후 석 달 동안에만 15건에 해당한다. 북한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마치 인내심을 시험하듯이 이 합의를 위반해 수많은 도발을 자행하였고, ‘전술핵 다량 생산’으로 한국과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대응 노력과 국민적 인식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1월 4일,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남북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북한의 무인기 도발 등 군사적 위협 강화에 대한 강력한 경고 차원의 메시지로 볼 수 있다. 한국 정부는 그간 북한의 술한 도발과 위반에도 9·19 군사합의를 남한과 북한이 함께 지킬 때 의미가

있으며 준수를 촉구해 왔으나, 이번 소형 무인기 영공 침범은 ‘레드 라인’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남북 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 안전보장 및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기간을 정해 남북합의서의 효력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이번 대통령 지시는 북한의 ‘추가 영토 침범’을 가정한 것이어서 당장 합의 파기 절차를 밟으라는 건 아니지만, 새해 초부터 남북한이 ‘강 대 강’ 대응으로 치닫고 있어 깊은 우려를 유발하고 있다. 9·19 남북 군사합의는 체결 당시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최초로 지상·해상·공중 모두에서 남북 간 적대행위의 중단 구역을 설정한 데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이 위협에 빠질 수 있으며, 서해 평화수역 설정과 공동어로 구상도 서해 북방한계선의 무력화와 합동 작전체계에 차질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었다. 또한 MDL 20~40km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은 군의 적정 정찰을 제한하였으며, 군의 훈련 여건을 제한함에 따른 실전적인 대비태세가 부실해질 것을 우려하기도 하였다.

군사합의서로 평화를 확보하려면 북한도 약속을 지키는 ‘정상 국가’여야 한다. 북한은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이후 9·19 남북 군사합의서까지 남북한 간에 수많은 회담과 성명, 합의서를 체결했지만 한 번도 제대로 끝까지 지키지 않았다. 그럼에도 남북 군사합의서는 당장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한국은 국방의 약화를 감수하면서 까지 지켜내려고 노력해 왔던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비핵화 의지가 없고 한국을 대상으로 군사적 도발과 안보적 위협을 지속해 오고 있는 북한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음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특히 지난 2018년부터 국방백서에서 삭제되었던 ‘북한은 적’이라고 적시하여 『2022 국방백서』에 포함하기로 한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이다. 그러나 일부에서 윤 대통령의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 지시에 대해 ‘선투르고 위협하다’는 의견과 함께 한반도 위기관리가 정부 역할이라는 주장에 귀를 열어 놓을 필요는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행정 수반이자 군 통수권자로서 이를 위협하는 적에 대해 ‘보복과 응징, 일전불사의 결기’는 필요하나 국민적 갈등의 계기가 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동시에 더 큰 인내심을 갖고 북한의 합의 준수를 강력히 요구하고, 안전장치인 ‘군사합의’를 먼저 무효화함으로써 북한의 전략에 휘말리지 않는 지혜도 긴요한 때이다.

영화 '영웅'이 불러낸 일본 다시보기

박 순 제

(대덕대학교 교수)

(향균 안보전략연구원 논문 심사위원)

I. 영화, 뮤지컬, 도서 등 안중근 의사 돌풍

2023년 새해 벽두부터 뮤지컬 영화 <영웅>이 돌풍이다. 지난 2022년 12월 21일 개봉한 후 한 달이 채 안된 2023년 1월 18일 현재 265만 명이 본 것으로 집계 됐다. 개봉 첫날에는 10만 명의 관객이 몰렸다. 영화관람 성향 분석을 보니 남성이 52%, 여성이 48% 관람해 남녀 구별 없이 비슷하게 봤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34%, 20대가 27%, 40대가 26%, 이어서 50대 10%, 10대 3% 순이다. 20대, 30대, 40대가 전체 분포 중 무려 87%를 차지했다. 영화의 재미와 구성 등을 떠나 한 번쯤 볼만한 영화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래서 필자 역시 지난 1월 8일 지인 부부와 함께 이 영화를 봤다.

또한 뮤지컬 <영웅>도 작년 12월 21일 서울 LG아트센터 공연을 시작으로 앞으로 지방 순회공연도 연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안중근 의사의 짧고 강렬했던 생애를 그린 소설 <하얼빈>도 지난해 출간됐다. 김훈 작가가 쓴 이 책은 서점가에서 판매 부수 정상을 달리고 있다고 한다. 그 때문인지 서울 중구에 위치한 <안중근 의사 기념관>에는 전년 대비 방문자 수가 최근 들어와 2배 이상 늘었다. 이처럼 안중근 의사가 1909년 10월 26일 거사를 감행했던 옛 만주의 하얼빈(지금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시)에서, 2023년 초입에 대한민국의 품으로 돌아왔다. 1백 년하고도 14년이 지난 지금, 왜 안중근 의사 돌풍인가?

돌풍은 사회적으로 갑작스럽게 관심을 끄는 현상을 비유하는 말이다. 돌풍현상이 급작스럽게 일어나는 것은 당시의 시대와 사회가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나타날 것이다. 즉 이 현상은 그 공동체가 현재의 어려움이 있거나, 미래의 자기이익(물론 공익이나 국익도 포함된다.)을 높이기 위해서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물론 공동체 혹은 개인에게 이익이 안 된다면 금방 사그라들겠지만. 그렇다면 이 현상은 2023년 한국의 현실이 어떡하길래 공동체의 구성원이 이렇게 돌풍을 만들고 있는 것일까.

우선, 문화평론 전문가들은 공동체가 처한 상황이 어려울수록 사람들은 과거 위인들의 이야기를 찾게 되고, 그 서사에 큰 감동을 받는다고 분석한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의 한국 공동체가 경제적으로는 어렵고, 사회는 갈등이 난무해, 많은 사람들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을 기다리고 있다는 뜻일 것이다. 영화 <영웅> 관객의 87%가 20대, 30대, 40대의 젊은 세대이다. 이들이 현재 우리 사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백마의 초인>으로 안중근 의사를 불러냈다는 것이다. 이런 류의 영화는 한때는 애국 마케팅이라고

외면하기도 했지만, 안중근 의사의 영웅 서사가 〈백마 타고 올 초인〉으로 오히려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한국을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북한 등 각국 간의 관계가 서로 자국의 이익에 따라 꺾고되고,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인물을 갈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즉 북한의 한-미를 급박하면서 쏘아대는 무모하고 무제한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현재 진행형 전쟁, 중국과 러시아의 긴밀한 관계, 일본의 전쟁 가능국으로 변모 지속 등이 그것이다. 이 상황이 바로 안중근 의사가 활약했던 1910년을 전후한 시기와 비슷하다는 것이다. 일본의 한반도 합병 야욕, 러시아의 남하 정책, 유럽 제국주의 열강들의 침략 등. 안중근 의사는 이런 국제적인 상황에서 한·중·일 3국이 연합해 동양평화를 지켜내자고 제시했다. 오늘날 국제정세, 특히 일본의 광폭적인 행보와 중국의 움직임 보면서 〈동양평화론〉의 주창자 안중근 의사가 소환된 것이고, 안중근 의사가 이런 국제질서 속에서 나의 이익과 우리 공동체의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영웅의 서사로 맞이하고 싶은 욕구가 컸기 때문인 것이다. 특히 안중근 의사가 한반도를 집어삼키려는 일본의 식민침략에 목숨 걸고 항거하면서 〈동양평화론〉을 주창했지만, 이에 아랑곳 않고 2022년에도 일본은 전쟁 가능국으로 가기 위한 광폭 행보를 취하자 안중근 의사를 다시 불러내는 촉매제가 된 것이다.

II. 전쟁하는 나라로 회귀하는 일본의 광폭

일본의 국방정책은 전수방위이다. 專守防衛란 일본이 외부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을 때만 방위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1989년에 일본이 발간한 〈방위백서〉에, "일본은 상대방으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방위력을 행사하고, 그 방위력 행사의 양태도 자위를 위해 필요한 최저한도에 머물게 하며, 보유하는 방위력도 자위를 위해 필요한 최저한도의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명시해 놓았다. 그러던 일본이 2차대전 패전 후 약 80년 간 지켜 온 전수방위 근간을 흔드는 광폭 행보를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전수방위 원칙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것들을 예를 들어 보자. 일본 국방비 예산을 2023년부터 GDP 대비 현재 1%에서 2% 수준으로 올린다. 앞으로 일본의 국방비가 100조 원이 넘게 되는 것이다. 한국의 2023년 국방비는 57조원이다. 일본은 이 돈으로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의 군사 대국이 되겠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런 군사 대국화 행보를 중국 부상에 따른 국제질서 변화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을 명분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 대해 일본 시민사회에서조차 평화헌법에서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일본으로부터 해코지를 당한 한국 입장에서는 곱씹어 봐야 할 주목거리다.

하나만 더 들자. 2022년 8월에 일본 정부는 〈반격능력 보유〉를 포함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결정했다. 〈반격능력〉이란 적의 사정거리 바깥에서도 가상 적국의 미사일기지사 지휘통제기능 등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는 것이다.

예를 든다면 일본이 북한·중국 등의 미사일 기지를 직접 타격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반격 능력)을 갖춘다는 것이다. 심지어 독도 대응을 위해 반격 능력이라면서 공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원거리 반격을 하기 위해서는 타격무기 보유가 필수적이다. 그래서 일본은 사정거리가 1,250km 이상인 미국산 순항미사일 토마호크를 500기 정도 수입하기로 했다. 자국산 12식 지대함유도탄도 사정거리를 늘리기 위한 개량 작업에 착수하고, 사거리 약 3,000km의 극초음속미사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일본은 이 계획을 적의 공격으로부터 반격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자위권이라고 주장한다. 자칫 일본이 사정거리권 바깥에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 영구히 전쟁을 포기하겠다는 일본의 평화헌법과 그에 기초한 專守防衛 원칙이 무너져, 전쟁 가능국으로 변모해 나가려 하는 것이 아닌지, 그래서 주변국들로부터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일본으로부터 처절한 식민 경험을 당한 한국 국민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독도도 일본땅이라고 우기고 있는 실정이기도 한데 말이다.

Ⅲ. 일본의 광기어린 역사 잊지 않기

영화 <영웅> 관람객 87%를 차지하는 한국의 30대, 40대, 20대. 이들은 일본의 끔찍한 식민 지배와 작금의 전쟁 가능국으로 가려는 광폭적인 행보를 보고 극장으로 들어 왔다. 우리는 일본이 한반도에 너무 많은 해코지를 했다는 역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이 1392년에 개국한 지 딱 200년 만인 1592년 임진왜란을 일으켰다. 그리고 300여년이 지난 1910년 조선반도를 완전히 삼켰다. 그런 후 일본은 한국을 36년 동안이나 처절하게 식민화 시켰다. 여기서 우리는 경제, 정치, 의식 등의 자주화는 완전히 몰락됐고, 아직도 한국 사회에 남아도는 문제로 발전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영화 <영웅>을 보면서 분명하게 가슴 속 깊이 간직하고, 기억해야만 할 말이 있다. 아베 노부유키가 한 말이다. 이 사람은 1944년 7월에 일본의 제9대이자 마지막 조선총독으로 부임해, 전시 군수조달과 여성정신대 등 인력 동원, 친일 조선인을 회유하는 정책을 펼쳤다. 일본의 패전과 조선의 해방까지 본 총독이다.

그가 총독부에서 마지막으로 항복문서에 서명하고 떠나면서 남긴 망언이다. “우리 대일본제국은 패전했지만, 조선은 승리한 것이 아니다. 내가 장담하건대, 조선인들이 다시 제정신을 차리고 찬란하고 위대했던 옛 조선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여년이라는 세월이 훨씬 걸릴 것이다. 우리 일본은 조선인들에게 총과 대포보다 더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 놓았다. 결국 조선인들은 서로를 이간질하며 노예적인 삶을 살 것이다. 보아라! 실로 옛 조선은 위대하고 찬란했지만, 현재의 조선은 결국은 식민교육의 노예 나라로 전락할 것이다. 그리고, 나 아베 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일명 <아베 노부유키의 저주>라고들 한다. 물론 이 말을 했는지 등에 대한 논란은 일부 있지만, 임진왜란부터 자행해 왔던 일본의 광기어린 식민지 정책, 또다시 전쟁 가능국으로 광폭적인 행보 등을 고려해 볼 때 우리는 결코 없었던 말로 치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가 보낸 수의와 마지막 말은 영화를 보는 모두를 울리게 했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에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네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다른 마음먹지 말고 죽으라.” 그녀의 말은 우리에게 더 큰 울림을 주었다. 그녀의 말은 아베 노부유키의 말을 되새기게 하였다. 일본은 주기적으로 대륙침략을 꿈꾸고 있다는 것.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문 의

• 안보전략논단 담당

02)499-0201/korvass0201@naver.com